

 보 도 자 료 2013.5.31.(금)	행사문의	구 미 영 (02-3156-7031)
	언론담당	황 애 리 (02-3156-7296)
	보도일자	2013.5.31.(금)
	※ 총 7쪽 (붙임 포함) www.kwdi.re.kr	

가사노동자 보호와 제도화 시급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사노동자 제도화 방안 국제컨퍼런스 개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오는 6월 4일(화) 오후 13시 30분부터 18시까지 “가사노동자 제도화 방안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민현주, 국회의원 김춘진,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가 공동주최하며,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 후원한다.
-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공급되던 가사서비스를 공식영역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일·가정양립 지원,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보호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자의 대다수가 현행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서 불합리한 관행과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가사노동자의 제도화를 통해 여성 고용률의 향상,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일·가정양립 지원이라는 중요한 정책과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행사는 가사서비스노동자 보호 제도가 발달한 홍콩, 벨기에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그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가사서비스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입법과제와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최금숙 원장은 “이번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가사서비스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4대 보험 등 제도화에 대한 국내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입법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행사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 이번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엘리자베스 탕(Elizabeth Tang) IDWN 국제코디네이터가 “홍콩 가사노동자 보호 제도”를 주제로, 벨기에연방정부 고용 및 사회적 대화부의 베스 버지니(Vaes Virginie)가 “벨기에 가사노동자 제도화 정책의 경과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벨기에 기독교노동총(ACV-CSC)의 이브 기츠(Yves Giets) 정책비서가 “벨기에 가사서비스 바우처 제도 평가”를 주제로,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한국 가사노동자 실태와 보호 방안”을 주제로,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가사노동자 보호와 제도화를 위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 주제 발표 후에는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교수, 박광일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정책센터장이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붙임 1. 발표자 프로필 및 발표 주요내용

붙임 2. 행사 개요

붙임 1 발표자 프로필 및 발표 주요내용

□ Elizabeth Tang(IDWN 국제코디네이터)

○ IDWN

- The International Domestic Workers' Network (IDWN)은 가사서비스 노동자 및 노조로 이루어진 국제조직. 2006년에 암스텔담에서 첫 모임을 갖고 가사서비스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함. 2009년에 IDWN이 공식 출범하고 ILO에서 2011년 가사서비스노동자의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협약(제189호)과 권고(제201호)가 채택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음.
- Elizabeth Tang은 ILO협약 채택 과정 및 국제 동향 관련 풍부한 지식 갖고 있으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홍콩 사례 중심으로 발표함.

○ 발표 내용

- 홍콩의 가사서비스노동자 보호 법령과 제도, 가사서비스노동자 보호 운동의 경과와 발전방향

□ Vaes Virginie

- 벨기에연방정부 고용 및 사회적 대화부(한국의 고용노동부에 해당) 소속.
- 노동시장 관련 조사, 연구 작업 수행. 작년까지 가사서비스노동자 및 서비스 바우처 제도 관련 연구 진행
- 발표 내용
 - 벨기에 가사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개요와 현황 소개

※ 벨기에 가사서비스 바우처 제도

- 벨기에에는 서비스 바우처 제도(service cheques system; dienstencheques; titres-services)을 통하여 가사서비스 이용비용의 약 2/3를 국가가 개별 가정에게 지원하며 서비스 바우처제도는 개별 가정이 직접 가사서비스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승인받은 가사서비스 업체에 직접 고용된 가사서비스노동자를 사용할 때에만 적용됨.
- 서비스 바우처 제도 하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가사서비스 업체는 가사서비스노동자를 직접고용 해야 하는데, 3개월 또는 6개월까지는 시간제 또는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¹⁾ 서비스 바우처 이용 가정에 대한 비용 지원 뿐 아니라 가사서비스 업체의 사회보험부담금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상당한 수준의 정부 재정 부담을 요구한다. 2004년 1월부터 실시된 이래 벨기에 정부 재정 부담은 증가추세이며 2010년에는 8억 1천만 유로를 부담했다고 함.²⁾

- 벨기에 정부는 실업률 저하 및 양질의 여성 일자리 양성 그리고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이라는 다층적인 목표를 위하여 가사근로의 제도화 및 제도화를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였음. 벨기에의 사례는 가사서비스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 가사서비스의 공급구조 자체를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해줌. 또한 가사서비스 공급구조의 개선은 가사서비스노동자라는 특정 직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및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줌. 이러한 다면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벨기에 정부는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었음.(구미영 발제문에서 발췌)

□ Yves Giets(벨기에기독노동총(ACV-CSC) 정책비서)

○ ACV-CSC

- ACV-CSC는 170만 명의 조합원이 조직된 벨기에기독노동총으로 벨기에 연방의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여 노동 관련 주요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함. 벨기에 가사서비스노동자 조직화 및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해 음.

○ 발표 내용

- 벨기에의 가사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가사서비스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

□ 윤자영(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경제학박사/노동경제, 가족경제 전공)

○ 발표 내용

- 한국의 가사근로자 실태 및 보호방안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자리 불안정성,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4대보험의 배제 등 가사노동에 대한 규제와 보호가 전혀 없는 현실에서 일반 근로자들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으로 일하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가사서비스노동자의 직종과 근로형태에 따라 요구와 법제도적 보호의 강조점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따라서 가사서비스노동자 유형별로 적절한 보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발제문 내용 중 일부 발췌)

□ 구미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센터 부연구위원/노동법 박사)

○ 가사서비스노동자 보호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 이 발표에서는 가사서비스노동자의 노동법적 보호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함. 노동관계법 상의 적용배제 조항은 성차별로서 위헌 소지가 있으며 가장 취약한 집단인 가사서비스노동자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는 점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적용배제 조항 폐지만으로는 가사서비스노동자를 노동관계법의 보호 영역에 포섭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된 첫 번째 쟁점은, 적용배제 조항을 폐지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전면적용할지 여부의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해 이 발표문에서는 휴게시간 등의 예외적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아동, 장애인, 환자의 안전과 가사서비스노동자의 휴식권을

1) 실업급여나 저소득층 지원 급여를 받던 실업자가 가사서비스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기간제 형태로 고용할 수 있다.

2) World Solidarity, Respect, rights and recognition: Domestic work and the ILO standard setting process 2010-2011, Global thematic report . n° 3, 19-22면.

조화시킬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그 외의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가사서비스노동자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음. 다만 재가 육아도우미나 재가 간병인, 재가 가사도우미(B유형) 등의 경우 지 불능력이 낮은 개별가정이 사용자라는 점에서 노동관계법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위험성이 있음. 따라서 이는 가사서비스 공급 경로를 산업화, 제도화 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프랑스, 벨기에 등의 방식을 고려하여 보완해야 할 것임.

- 두 번째 쟁점으로는 가사서비스노동의 비전형적이고 불안정한 고용형태(일용직, 시간제)로 인해 노동법 적용에서 사실상 배제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음. 가사서비스노동자의 상당 수(A, B유형)는 일용직 및 초단시간근로자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함. 그 결과 휴일, 연차휴가 규정 관련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퇴직급여 및 4대 보험에서 적용이 배제된다는 문제가 남아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제도처럼 일용 가사서비스노동자를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하거나 일정 규모와 자격을 갖춘 허가받은 가사서비스 업체에 직접 고용되도록 하여 일자리 공급구조를 제도화, 안정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가사서비스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근로자성 논란, 사용자 확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D유형). 처음부터 공식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이다 보니 근로자성을 인정받거나 노동법상 사용자를 정함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표적인 D유형 가사서비스노동자인 병원 근무 간병인의 경우 병원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건강보험제도로의 편입과 의료법 개정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가사서비스노동자의 특성상(임주노동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장시간 노동 위험성 등) 특별히 보호나 지원이 요구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 등에 추가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율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임.

< 가사서비스노동자 보호 및 제도화 관련 기본 방향 >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전면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업무 특성 상 부분 적용이 필요한 경우 예외로 규정
-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제도화하는 방식을 통하여 퇴직급여, 4대 보험 등의 비용 및 행정 절차상 부담 문제 해결. 일자리의 제도화는 가사서비스노동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 가사서비스 노동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노동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특별법을 입법하여 규율(임주 가사서비스노동자에 대한 장시간 노동, 인권 침해 문제 등)

※ 발제문에서 발췌

붙임 2 행사 개요

- 행사명 : 가사노동자 제도화 방안 국제 컨퍼런스
- 일시·장소 : 2013년 6월 4일(화) 13:30~18:00,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공동주최 :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국회의원김춘진·국회의원민현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 후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3:30~14:00	개회식	개회사 고현욱(국회입법조사처장) 환영사 김춘진 민주당합당 국회의원 민현주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의진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대표의원 남윤인순 국회성평등연구정책포럼 대표의원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축사 신계륜(국회환경노동위원장) 김상희(국회여성가족위원장) H.E. Luis Teodoro Cruz(주한 필리핀 대사) 사회 : 김소영(한국비교노동법학회장, 충남대 로스쿨 교수)
14:00~14:20		제1주제 홍콩 가사노동자 보호 제도 Elizabeth Tang(IDWN)
14:20~14:40	주제 발표	제2주제 벨기에 가사노동자 제도화 정책의 경과 및 발전방향 Vaes Virginie(EPS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Dialogue)
14:40~15:00		제3주제 벨기에 가사서비스 바우처 제도 평가 Yves Giets(벨기에노총ACV-CSC Political Secretary)
15:00~15:20	휴식 및 다과회	
15:20~15:40	주제 발표	제4주제 한국의 가사노동자 실태와 보호 방안 윤자영(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15:40~16:00		가사노동자 보호와 제도화를 위한 법적 검토 구미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여성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다

16:00~16:10	휴식 및 다과회	
16:10~18:00	지정토론	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교수) 박광일(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한인상(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홍승아(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정책센터장)
	청중과의 토론	
18:00	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